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했다.

/뉴스

# “더는 제 가족 일로 부담 드려선 안돼”

## 조국 법무장관 결국 사퇴

지지율하락·여론부담·檢압박 등 상황악화 우려에 ‘자진사퇴’ 한 듯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취임 35일만이다. 조 장관은 지지율 하락과 여론 부담, 검찰 수사 압박 등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을 우려해 자진 사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장관은 이날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 지명 후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두 당의 격차는 현 정부 들어서 최소범위인 0.9%포인트로 좁혀졌다. 특히 일간 집계로 보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이 33.0%, 자유한국당이 34.7%로 나타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통계도 있었다.

무엇보다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제는 선을 넘어 문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가시화한 게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수십만명이 참가한 ‘문재인 퇴진-조국 사퇴’ 촉구 집회가 열린 데 이어, 그로부터 일주일도 안 된 지난 9일 열린 집회에도 인파들이 광화문광장 일대를 가득 메웠다.

서초동에서 ‘조국수호’를 외치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친여권의 맞불 집회가 열렸지만 조 장관으로 불거진 정국을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까지 ‘조국 국감’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이슈를 관심 밖으로 놓이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검찰이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방침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힌 이날 정 교수는 5번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조 장관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런 상태에서 다음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 것도 부담

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 장관은 직을 사퇴하면서 현직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은 모면하게 됐다.

또 14일 오전 이른바 ‘조국표 검찰 개혁안’까지 직접 발표한 것도 사퇴를 위한 줄기용 명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 뒤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검찰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사퇴로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장기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8월말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교수 외에도 조 장관의 친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번 주 내로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로 예상되는 구속 심사는 이번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한 혐의점을 구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여론 악화 등으로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부실수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 과정에서 자신이 재직하던 동아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오는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한편, 조 장관은 딸·아들의 인턴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과 사모펀드 운용 등에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특히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 내용을 조 장관 등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판단, 이는 사실상 직접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 특수부 대거 축소, 반부패수사부로 개명

## 법무부, 검찰개혁안 발표

오늘 국무회의에 개정안 상정 45년 사용 ‘특수부’ 명칭 교체

서울 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별수사부(특수부)가 남고 특수부의 수사범위가 축소된다.

14일 오전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보고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다음날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이래 약 45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 명칭이 사라진다. 3개청의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현재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특수부의 사무 범위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형사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다음날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이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검찰 수사관행 변화도 이뤄진다. 1회 조사시간이 총 12시간(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이 보장된다.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도 제한된다. 심야조사는 오후 9시부터 새벽 6시 이전 조사로 명시한다. 다만 열람시간은 이 시간에서 제외한다.

또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장기화 및 부당한 별건수사에 대한 실효적 통제방안도 마련한다.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와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 적법절차 위반 시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요구 제한, 출석요구·조사 과정 기록화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

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할 계획이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 훈령)도 10월 중 개정한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리며, 법조인 비율을 2분의 1 미만으로 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현경기자

# “조-윤 檢개혁 희망 했지만... 결과 송구”

(조국-윤석열)

## 文 대통령, 靑 수석보좌관회의

“언론역할 생각할수 있었던 기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2시 장관직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그러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 관련) 우리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점”이라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결코 (검찰개혁은)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피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못박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시는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보회의의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조 장관은 같은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장관직을 내려놨다.

조 장관은 본인·본인 가족을 둘러싼 숱한 논란으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다. 결국 문 대통령이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문제는 조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을 했음에도 거짓으로 드러난 점이다.

이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큰 타격을 줬다. 실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8일,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전국 성인남녀 2502명을 대상으로 ‘10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3%)’를 조사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3.0%p 하락한 41.4%, 부정평가는 3.8%p 오른 56.1%다. 이러한 지지율은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